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무철(경남대학교)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튀세르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질 토대를 회복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현주소이자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교육,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알튀세르, 생산조건, 재생산

1. 서론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개최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채택하였다. 기존의 전반적 11년제 의

무교육제에서 교육 연한을 1년 연장하여 12년 무상의무교육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육체제 개편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4년제로 유지되어 온 소학교 교육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로 통일되어 있던 6년제 교육체제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여 각각 3년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학생들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학습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교육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기술 교육을 좀 더 강화하였다.¹⁾ 이에 따라 북한은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새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²⁾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내용을 보면, 북한 교육정책 변화의 정치사상적·사회경제적 배경 및 의미 분석, 교육정책의 특성, 학제 개편의 후속 조치 등을 전망하고 있다. 교육정책 변화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의미로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교육-노동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한다.³⁾

1)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2) 북한은 2013년에 개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초급중학교)’과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고급중학교)’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은 10년 만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2014.9.5)에 보낸 담화문에서 “다른 사업에서는 좀 지장을 받더라도 교육 사업에 요구되는 자금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 사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강조했다. 김정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2014.9.5),”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이에 따라 북한은 2014년 9월 25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 교육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2014년 9월 26일.

3) 박찬석, “북한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일반적으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에 주목한다면, 현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는 기존 교육제도의 사회 재생산 기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북한 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튀세(Louis Pierre Althusser)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⁴⁾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4.10.28), 52~71쪽;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4.10.28), 73~97쪽;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개편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교육정책 분석,” 『김정은체제에 대한 입체적 조명과 통일담론』(2014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4.4.11), 425~438쪽;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차승주,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179~203쪽 등을 참조.

- 4) 교육사회학에서는 알튀세를 비롯한 좌파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의 재생산 기능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왔다. 김신일, 『교육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2006), 92~96쪽. 북한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한편, 학교는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 영역을 통해 계급적 불평등을 유지·심화시키는 재생산적 기구라고 주장하는 문화 재생산 이론도 있는데, ‘문화자본’ 개념을 통해 교육에서 문화의 기능을 부각시킨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장 클로드 파세통(Jean-Claude Passeron), 『재생산』, 이상호 옮김(서울: 동문선, 2000). 문화 재생산이론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이 논의에서는 사회구조 변화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정치경제 영역에 대한 논의로 한정한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알튀세는 모든 사회구성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동시에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조건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체는 두 가지의 생산조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해야 한다. 생산력의 재생산은 물질적 생산조건, 즉 원료, 기계 등의 생산수단의 재생산과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임금 등의 물질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생물학적 재생산과 함께 복잡한 생산과정체계에서 기능하는 데 알맞은 적절한 기술(자질)의 재생산을 포함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구성체에서는 노동력의 기술(자질) 재생산이 현장(생산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사회구성체의 경향이 감소하고, 교육제도와 다른 여러 가지 기관 및 시설 등에 의해 생산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동력의 기술(자질) 재생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기존 질서의 규칙들에 대한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도 필요로 한다. 즉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이나 그 이데올로기의 ‘실천’ 재생산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⁵⁾

생산관계⁶⁾의 재생산은 상부구조⁷⁾에 의해 보장되는데, 구체적으로

-
- 5) 루이 알튀세(Louis Pierre Althusser), 『레닌과 철학』, 이진수 옮김(서울: 백의, 1991), 135~141쪽.
- 6)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 7)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체가 경제적 토대(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와 이를 반영하는 상부구조(정치·법, 이데올로기, 사회문화 등)의 상호작용으로 유지·재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알튀세는 이러한 상부구조를 정치·법적인 것과 이데올로기적인 것, 두 개의 수준(심급)으로 구분한다.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⁸⁾가 국가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보장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구성체에서 억압적 국가기구가 제공한 ‘업페물’ 뒤에서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다. 특히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가운데 지배적 위치에 들어선 것은 바로 교육이데올로기기구로, 과거 교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바로 학교다. 자본주의사회구성체에서 학교는 개인을 ‘사회적 주체’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⁹⁾ 결국 교육이데올로기 기구인 학교는 노동력 및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튀세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반해 당·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출에 있음을 공식화한다. 북한에서도 교육을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교육 기능에 주목하는 알튀세의 논의를 사회주의사회인 북한에 적용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 북한 교육정책의 변화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알튀세가 설명하는 교육의 노동력 및

8) 억압적 국가기구는 군대, 경찰, 정부 등을 의미하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종교, 교육, 가족, 법,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관련 기구를 말한다.

9) 루이 알튀세(Louis Pierre Althusser), 『레닌과 철학』, 154~162쪽.

10)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 1977.9.5),”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355쪽.

생산관계의 재생산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를 큰 틀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정책의 변화 배경과 내용

1) 변화 배경: ‘고난의 행군’ 이후 교육환경의 양극화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1993년 북핵 위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1994년부터 3년간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난이 겹친 경제난으로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했다. 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겼다. 이 시기 배급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중앙공급체계는 거의 붕괴된 상태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당·국가에 의존했던 주민들은 식량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수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당·국가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생적 시장화’의 확산과 당·국가의 능력 및 정당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그대로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원들은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봉급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

각한 생활고를 겪음에 따라 학교수업에 매진할 수 없었다. 학생들도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식량을 구하러 다니면서 학교 결석률이 높아졌다. 또한 학교현장에 교육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결국 부족한 교육물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의 학교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목표와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공식 출범해 ‘고난의 행군’으로 와해된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실리주의 교육노선의 관철을 주장했다.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교육 재원이 부족한 사정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 강조한 ‘선군시대 혁명인재’는 1990년대 체제위기 속에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적 무장과 전문성 함양을 강조한다.¹²⁾ 북한은 선군시대 혁명인재 양성을 위해 실리주의와 실력 본위의 교육에 입각한 과학기술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수재교육의 확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나갔다. 그런데 정책의 내용

11) 한만길 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314~324쪽.

12) ‘선군시대 혁명인재’는 당성과 전문성, 즉 선군사상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말한다.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에 학교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인민교육』, 제1호(2008), 5~6쪽;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후대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인민교육』 제1호(2009), 5쪽.

을 보면, 경제난 속에서 당과 국가가 모든 교육 부문에 투자할 수 없는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교육 재원의 부족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해 단기간 내에 과학기술 분야 등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인 것이다.¹³⁾

이러한 교육정책은 결국 교육환경의 양극화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제1중학교를 확대하면서 중등교육체계의 서열화와 함께 제1중학교 및 대학의 입시경쟁이 심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실력 본위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간부정책에서 학력과 실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입학 및 성적 관련 비리의 만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학교의 서열화 및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일반학교에서는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즉,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일부 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빈곤이 지속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에도 반영되어 일반 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공교육비 지급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반면에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다.¹⁴⁾

13)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교육,” 『북한 교육 60년』(파주: 교육과학사, 2010), 217~258쪽; 신효숙,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 (2010).

14) 1990년대 말 중등교육체계가 평양 제1중학교-도 제1중학교-시·군·구역 제1중학교-일반중학교의 서열화된 체계로 개편되고, 학교 등급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학생들의 학력 및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편차가 발생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수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출신성분이 좋은 학생들과 뇌물을 매개로 한 부정과 비리행위로 입학한

한편, 북한의 교육활동 속에서 집단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집단 활동은 집단주의 교육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원리로서 국가와 집단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고취하고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의 태도를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집단 활동과 함께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북한 학생들에게 수령과 당·국가 권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과도한 노력 동원으로 인한 학습 공백과 함께 북한 학생들의 노동 및 생활총화 기피, 비사회주의적 예절, 자유주의적 유행 풍조, 절도와 폭력, 학교 이탈, 상거래 행위 등의 사회적 일탈행동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 집단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경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교육환경의 양극화 속에서 북한 학생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체험하고, 북한 실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면서 불만을 갖거나 반발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이 출신 성분이나 돈에 의하여 거의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체념하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으로 확산된 ‘자생적 시장화’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거나 출세를 하는 것보다 ‘화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물론 북한은 보통교육 부문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8), 181~187쪽.

15)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44~45쪽.

고해왔으나 지역, 분야, 계층 등에 따른 차별 지원으로 교육 불평등 양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부문의 질적 차이, 수재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와 보통교육 간의 투자 차이, 출신성분과 부에 따른 간격 등이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고질적인 ‘세외부담’(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현상과 학생들의 과도한 노력 동원으로 인한 학습 공백,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로 인해 북한 ‘새 세대’의 사상적 이완이 만연해져 있는 상태다. 경제위기로 인해 만성적인 교육 인프라 부족의 악순환과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평등원리’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고난의 행군’ 이후 교육환경의 양극화로 북한이 그토록 자랑해왔던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상황이다. 해방 이후 당·국가가 주도한 공적 영역이었던 교육체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개최해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북한은 1973년에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한 이후 40여 년 만에 새로운 학제로 개편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법령 채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지식경제

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주장한다.¹⁶⁾

법령은 크게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 등 5가지 사항을 결정했다.¹⁷⁾

우선 첫째, 북한 전역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것과 그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한다.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17) 위의 글.

쳐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끝내도록 했다.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총적 목표와 교종별 도달목표를 명백히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새 학년도 전까지 교종별 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 급 학교들에 시달하고 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문제는 따로 정하기로 했다.

둘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부족한 교원 보충과 자질 향상,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1) 소학교 학제를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는 데 맞게 교원 노력기구와 교원양성 부문 대학 입학생 계획을 늘리고, (2) 시(구역), 군 단위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추 수 있는 중학교 졸업생(제1중학교 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추천, 입학시키며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3) 교원 경력자, 적격자들을 찾아내 부족한 교원대열을 보충, (4) 2013년 새 학년도 전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과정안을 검토하고 교원양성 목적에 맞게 바로 편성하며 교원강습, 재교육을 강화하여 교원,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5)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육행정관리를 컴퓨터화하며 교육위원회와 전국의 교육기관들 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며, (6)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중등일반교육 부문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 구현 등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과 관련해서는 (1)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며,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한 교실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들을 새로 건설

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을 2017년 새 학년도 전으로 끝내며 살림집지구 건설에서 학교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 (3)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 지역들에 분교와 교원, 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며 통학버스와 통학열차, 통학배 운영을 정상화, (4)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 교육실습용 설비와 실험기구,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 (5) 교육도서를 인쇄하는 공장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종이를 비롯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종별 교과서, 참고서들을 원만히 보장, (6) 도(직할시)마다 2013년 상반기년까지 경상유치원과 같은 본보기를 1~2개씩 꾸리고 모든 유치원들에 일반화, (7) 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 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 등을 제시했다.

넷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 (2)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모범교육군(시, 구역) 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 (3)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은 학교후원단체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고, (4)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교원, 학생들을 과정 안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 강화, (5)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교육과학 연구기관들에 사회적 과제를 망탕 주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강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북한의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

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학제 개편의 주요 핵심은 중등교육의 개편과 질적 수준의 향상,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사회주의 교육체제’ 수준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김정은의 사상과 연결하여 체제의 정당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다.¹⁸⁾ 또한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알튀세의 논리에 따르면, 교육은 생산조건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구성체의 유지 및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교육정책 변화가 노동력 및 생산관계의 재생산 기능 측면에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8)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중등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김정은의 사상과 연결하고 있었다. 리무석,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은 보통교육부문에서 툇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 『인민교육』, 제4호(2012.8). 리무석은 김정은의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은 인재대국, 교육강국건설을 다그치며 보통교육부문에서 툇튼히 들어쥐고 나가야 할 보검을 마련한 강령적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3.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1: 노동력의 재생산

1)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건설 과정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체계 및 내용 등을 형성하였고, 1970년대 들어 ‘11년제 의무교육제’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기반으로 한 ‘주체교육’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기존 교육체계 및 내용과 사회경제적 현실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강성대국 건설) 제시와 함께 체제정비 및 재건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해 교육정책에서도 부분적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시도하고 있는 교육체계의 개편은 이를 종합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압력의 반영이자 동시에 그 압력에 대한 북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체계 개편을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 측면에서 볼 때,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작업과 이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 양성을 위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미 군사, 정치사상 강국이기 때문에 경제강국, 문명국을 이룩한다면 강성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그리고 이러한 경제강국의 건

19) 리정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평양: 조선외국문출판사, 2014), 19~54쪽.
북한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고 이의

설을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 발전에 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해왔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 추구했던 외연적 성장 혹은 동원형 성장에 의존한 국가발전전략을 내포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1960년대 이래 끊임없이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내포적 성장전략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다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CNC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기술의 민수로의 전환 시도, IT, BT, NT 등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첫 연설에서 ‘강력한 군력+새 세기의 산업혁명=강성국가’라는 도식을 제시했다.²⁰⁾

북한은 2012년 12월 그동안 쌓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을 위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중요 생산 설비를 ‘CNC 기대로 고조’, 즉 컴퓨터 자동 제어 방식으로 설비를 바꿨으며, ② 중요 생산 공정을 ‘현대화’, 최신 설비로 교체했음을 의미, ③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을 위한 자동제어시스템과 모든 과정을 계량화,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성과는 구체적인 공장기업소명과 수치로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²¹⁾

북한이 밝히고 있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다.

실현을 독려해왔다. 그런데 2010년 전후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이를 공식화하고 있다. 강성국가 건설 논리는 강성대국 건설 논리에 없었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경제강국 건설과 함께 제시한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인민들의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선진강국”을 의미한다. 위의 책, 48쪽.

- 20)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연설(2012.4.15),”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 21) “세차게 타오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수백 개 대상의 중요 생산 공정과 설비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 『로동신문』, 2012년 12월 12일.

어쨌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산 공정과 설비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등으로 변화된 생산과정체계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수재교육을 통해 양성된 고급 전문 인력이 개발과 연구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를 산업과 연결시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을 갖춘 노동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와 생산 공정을 주요 공장기업소부터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지속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할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실리주의 교육’과 수재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발전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북한은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수재교육을 강화해 그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나갈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왔다. 따라서 북한 교육정책 변화는 지금까지 추진한 첨단과학화로 변화된 생산과정체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노동자의 충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후 노동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의 전수를 위해 교육 체계 및 내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교육정책 변화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군시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최근에는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국교육일꾼대회에 보낸 담화문에서 고등교육체계가 ‘공업경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

22)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초급중학교)’과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고급중학교)’을 보면, 기술교과에서 컴퓨터 및 정보기술을 실생활 및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기초기술’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82~88쪽 참조.

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였다.²³⁾

북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보더라도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을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구 구성은 1990년대 이후 현재와 같은 교육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인구증가율은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연령대별 인구의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아 및 14세 이하 인구 비중의 감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대했다. 이는 북한 사회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가능 인구 1인당 부양인구비가 증대함을 의미한다. 부양인구비가 증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원의 분배, 즉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서비스 부담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서비스 부담의 증대는 교육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복지서비스 부담의 증대는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생산성 향상의 증대를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대해야 한다.²⁴⁾ 현재 북한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나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으로의 전략 변화의 이면에는 이러한 인구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교육체계의 개편을 단행한 것이 단지 정치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유추해볼 수

23) 김정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2014.9.5),”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24) 북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65~129쪽 참조.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이루기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갖추고 생산현장에서도 기술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아동기부터 10여 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주입하는 학교교육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²⁵⁾ 그런데 북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도 요구된다.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부족한 교원 보충과 자질 향상, 교육방법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지식의 안정적 보급을 통해 교육의 노동력 기술 재생산 기능을 재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 혁명인재의 양성

앞서 말했듯이 노동력 재생산은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기존 질서의 규칙들에 대한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피지배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 및 지배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조작 능력의 재생산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에 대한 준비는 이데올로기적 복종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 형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²⁶⁾

25) 루이 알튀세(Louis Pierre Althusser),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옮김(서울: 동문선, 2007), 226쪽.

‘이데올로기적 복종이라는 형태하에서 노동력의 기술 재생산’의 북한식 표현은 바로 ‘선군시대 혁명인재’ 양성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선군시대의 혁명인재’를 제시했다. 선군시대의 혁명인재는 우선 정치사상교양으로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 우리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사람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교육과 컴퓨터 및 과학기술교육, 외국어 교육” 등 각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²⁷⁾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서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기둥감으로 더 잘 키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복은 회의 보고에서 “정치사상교육에 큰 힘을 넣어 새 세대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⁸⁾

북한은 교육정책 변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3대 세습 및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사회구성체를 정당화함으로써 기존 질서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복종심을 강화하고 확대재생산 하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이번 교육정책 변화

26) 루이 알뛰세, 『레닌과 철학』, 141쪽.

27)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에 학교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인민교육』, 제1호(2008), 5~6쪽.

28)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바탕으로 제3대 수령인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였다.²⁹⁾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교양’, ‘사회주의도덕교양’ 등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복종심 및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조작 능력의 재생산과 피지배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착취와 억압의 담당자들에게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말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배 이데올로기를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의 재생산을 요구한다.³⁰⁾ 북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소위 ‘백두혈통’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국가의 고위관료 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당·국가의 고위관료 세력, 즉 북한 엘리트 계층은 현 체제유지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이들에 대한 백두혈통의 집중적 투자와 혜택으로 형성되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상대적으로 일반주민들에 비해 외부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조건유지를 위해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령과 엘리트 계층 간의 ‘시혜-충성’의 교환관계가 유지되는 한, 교육을 통한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조작 능력의 재생산 기능은 제대로 작동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9) 북한은 초급중학교 정치사상교과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고급중학교 정치사상교과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과목을 신설하였다.

30) 루이 알튀세, 『재생산에 대하여』, 97~98쪽.

그런데 문제는 피지배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 기능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당·국가에 대한 ‘조직화된 의존관계’는 약화되고, 시장교환 논리를 매개로 한 현실적 생존논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사회 운영 원리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 위기로 교육 부문도 큰 타격을 받았다. 앞서 살펴봤듯이 교육재원 부족으로 지역, 분야, 계층 등에 따른 차별 지원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양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로 인해 북한 ‘새 세대’의 사상적 이완이 만연해져 있는 상태다. 경제위기로 인해 만성적인 교육 인프라 부족의 악순환과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평등원리’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와 학교 밖의 생활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체험하게 된다. 더욱이 자신의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이 출신 성분이나 돈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치사상 교육에 의문을 품고 나아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직장 이탈 이후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이득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직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배급과 봉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누가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것인가?

결국 교육의 피지배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간극을 우선적으로 좁혀야 한다. 이러한 간극의 해소를 통한 피지배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의 구축은 주민들의 당·국가에 대한 의존적 관계의 회복을 통

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북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다른 방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인식의 일부를 인정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새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정 기간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새 세대들로 하여금 당의 공식 가치지향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제이다. 이번 교육정책 변화를 통해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이라는 교육기능의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종심 재생산을 위한 물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요구된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노동력의 복종심 재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4.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2: 생산관계의 재생산

1)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학교의 역할 정상화

알튀세에 의하면, 억압적 국가기구는 본질적으로 힘을 통해(물리적 이든 아니든)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보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제공한 정치적 조건하에서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 바로 여기서 국가

이데올로기, 즉 국가권력을 보유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역할이 집중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가운데 지배적 위치에 들어선 것은 바로 교육이데올로기 기구인 학교이다. 서양의 봉건사회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였던 교회-가족이라는 한 쌍이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와 학교-가족이라는 쌍으로 대체되었다.³¹⁾

그런데 사회주의사회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공식적인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노동력 및 생산관계의 재생산 기능을 공식화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학교는 노동력 및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장이 되고 있다. 학교는 학령기에 처한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여 가장 민감한 감수성을 보이는 청소년기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술 및 자질 등을 주입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자, 농민, 지식인, 테크노크라트, 엘리트 등으로 사회 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사고와 행위를 하도록 교육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러한 학교의 재생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고난의 행군’ 이후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제도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사

31) 루이 알튀세, 『재생산에 대하여』, 219~225쪽.

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번 학제 개편으로 요구되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의 교육사업비 증대, 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와 설비, 자재 등의 우선적인 보장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내각이 책임지고, 교육시설(신축 및 증축) 및 교재출판 등은 국가계획 위원회에서, 교육시설 보수 등은 건설건재공업성이 맡도록 하는 등 역할분담체계를 갖추었다.³²⁾

그런데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마련은 어디까지나 경제정상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이다. 현재 북한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본다면, 여전히 재원조달 부문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학부모들의 ‘세외부담’으로 충당되었고, 이것이 정례화·관례화 되어 지속되고 있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 동원과 자원공출 없이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12년제 학제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국가에서 온전하게 책임지지 못할 경우 이는 더 큰 악순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교사의 생활도 보장 되지 못함에 따라 어렵고 힘든 교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빠졌다. 이에 따라 직업으로서 교사를 원하는 경우가 적어짐에 따라 교사의 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³³⁾ 물론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센

32)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33) 탈북자들은 대체로 과거 교사가 어느 정도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교원

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교원인구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³⁴⁾ 그런데 북한이 이번 교육정책에서 부족한 교원의 충원과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함께 교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교사의 충원과 자질 향상을 위해 사범대 및 교원대 입학정원 확대, 교원 적격자 선발 후 교원 활용, 중학교 졸업생 중 우수성적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이다. 교원대우에서는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는 기풍을 세”우고, “교원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식량과 댕감, 살림집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생활과 통학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³⁵⁾ 결국 노동력 및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이를 담당할 교원의 충원과 함께 자질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무상교육제도의 재확립을 통한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로 교원의 충원과

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어짐에 따라 교원의 수도 줄어들었다고 증언한다.

34) 직업분류의 기준을 보면, 1993년에는 교육·문화·보건 종사자로, 2008년에는 교육, 보건, 문화 종사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교원 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교육 관련 종사자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이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교육 관련 종사자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김두섭 외, 『북한 인구나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영철 외,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참조.

35)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교원에 대한 처우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설사 교원에 대한 대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교원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교원 역량의 질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선군시대 혁명인재’로서의 교원의 양성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교육환경에서 볼 때, 학교 시스템의 정상화와 함께 교원의 자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학교는 가족의 도움에 의지한다. 학교는 가족과 짝을 이루어 당·국가가 요구하는 공식 가치관을 새 세대에게 전수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충격은 가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족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녀의 역할에 있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출신성분과 부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가족은 자녀들이 학교교육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사적 활동을 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자녀들 또한 출세나 명예보다 ‘화폐’를 중요시하고 있다.³⁶⁾ 결국 학교에서 주입하는 공식 가치관과 가정생활에서 습득하는 가치관의 차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천’ 재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가족이라는 쌍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이

36) 필자가 인터뷰한 탈북자들은 대체로 남한의 학부모처럼 교육열이 높았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여건에 있었던 학부모들은 자제들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했다. 최근 북한의 ‘새세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룬다고 할 때, 학교와 가족에서 발견되는 위기는 곧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³⁷⁾ 사적 영역의 주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주의라는 국가적 규율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적 영역에 통합된 상태로 존재해왔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고난의 행군의 충격으로 인한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는 공적 영역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 균열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재조정 압력을 가중시켰으며, 사적 영역의 질적 변화와 구성부분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³⁸⁾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왔던 물적 토대를 근거로 사적 영역을 형해화하고 공적 영역을 확대해왔다. 그렇지만 그 물적 토대의 와해로 인해 사적 영역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대한 북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물적 토대의 회복이 없다면 북한의 선택은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할 필요성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의 재생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사적 소유 철폐를 통해 ‘생산의 목적이 더 이상 자본가의 교환가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인민(그

37) 루이 알튀세, 『재생산에 대하여』, 379쪽.

38) 이우영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참조.

리고 인민의 대리자로서 국가에 의한 전 인민을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자가 노동과 생산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노동 착취나 소외된 노동이 사라지게 되며,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그러나 현실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론과 달리 생산과정에서 국가가 자본의 역할을 한다.⁴⁰⁾ 현실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적 소유는 곧 국가적 소유를 의미했다. 결국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자는 관료나 행정기구가 되었고, 노동자의 자주관리는 실현되지 못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철폐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자인 국가(구체적으로 위계적인 관료제가 수립한 ‘계획’에 의한 생산-분배 체계 속에서 노동자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러한 생산관계를 기초로 한 사회구성 원리를 설계하고 작동시켜왔다.

사회주의 지배의 핵심 축은 위계적인 당·국가 조직과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인 당·국가 조직은 반대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원들의 충성과 규율에 의해 유지된다. 계획경제는 이러한 당·국가 조직의 효율적 지배의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국가 조직이 사회자원의 활용 및 분배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가 조직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활용하여 정치적 규율과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었다.⁴¹⁾ 즉 사회주의체제는 계획경제를 통

39)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과주: 한울, 2006), 11쪽.

40) 일부 좌파학자들은 현실 사회주의국가를 국가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또는 타락한 노동자국가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41) Andrew Walder,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G. Walder(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해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모든 권력을 독점한 당·국가 조직이 이를 정치적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분배해왔다. 이것은 경제적 자산에 대한 국가소유로 가능했었다.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주요 경제 자산의 국유화 조치로 전체 경제에서 사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삶은 당·국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도 이러한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한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사회구성체를 설계하여 작동시켜 나갔고, 이를 ‘주체사상’으로 정당화해왔다. 북한은 수령이 당·국가의 관료와 인민을 상대로 ‘호혜’를 베풀고, 이에 대해 관료와 인민들은 ‘충성’과 ‘노동’으로 답하는 구조를 만들어 수령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학교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주체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기술, 자질, 의식, 규범 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입해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충격은 계획경제에 의한 생산-분배 체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주민들의 당·국가에 대한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시켜 사회운영 원리의 위기를 불러왔다. ‘고난의 행군’의 충격으로 사회주의사회 시스템의 물적 토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학교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북한의 학교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기체적 사회운영 원리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의 본래의 이념과 달리 국가와 경제의 사회화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국가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1~2.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더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결속시키고 사회통합을 유지해왔던 사회운영 원리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자생적 시장화로 공식적인 계획경제와 합법·불(비)법적인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에 있어 시장경제 영역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시장경제적 활동이 경제위기의 강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곧 인민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결국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주민생활 보장이라는 물적 토대의 와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을 억압적 국가기구를 활용해 억제하는 것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부분적 묵인과 용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⁴²⁾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당-국가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가부장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관료 및 주민들의 충성과 순응은 물론 감시체제의 약화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와 비교했을 때 강력하게 보이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국가능력도 계획경제의 내재적 불완전성

42) 이에 대해서는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서울: 한울, 2008), 84~120쪽 참조. 북한 경제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부분적 수용-통제-완화’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사회경제적 변화의 부분적 묵인 및 수용의 정책이었다면,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의 ‘화폐개혁’을 들 수 있다. 시장통제나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로 북한 당국은 이러한 통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앙집권적 통제의 강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관료-주민 간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가 공존하는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지, 안정화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담합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 활동이 경제행위에 있어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관료적 조정⁴³⁾ 국면 내에서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이라는 매개물을 활용해 생존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관료와 주민들은 행정·명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복종을 받았다. 이러한 관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의 마비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의 대가로 관료들에게 뇌물과 대가를 지불하고 관료들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 또한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

43) 코르나이(Janos Kornai)는 경제의 조정양식을 관료적 조정양식, 시장 조정양식, 자주관리 조정양식, 도덕적 조정양식, 가족적 조정양식 등으로 구분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정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나 지배적인 조정양식은 관료적 조정양식이라고 설명한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pp.91~109.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의 조정양식은 시장 조정양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속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친인척의 사적 경제활동을 돕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해나가기도 했다. 다시 말해 관료적 조정 방식 내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생존논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가 시장교환 논리를 매개로 ‘현실’적 생존논리로 적극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의존적 삶과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관료적 조정 양식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적 조정양식과 결합하면서 ‘기생적 또는 약탈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⁴⁴⁾

북한 입장에서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사회구성체를 유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어느 정도 제도 내로 수용하여 결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소위 ‘김일성-김정일주의’ 안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교육정책 변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물질 토대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5. 결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치와 교육이 긴밀하게 결합된다. 교육과 정치의 결합이라는 특성은 학교교육의 목표, 내용, 형식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헌신할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으로 집약된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당과 국가

44) 이무철, 앞의 글, 107~115쪽.

지도자의 방침을 통해 표명되는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교육내용과 직결된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 교육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는 교육의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여 소위 ‘새 세대’를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동시에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선군시대 혁명인재, 즉 ‘주체형 인간’으로 전환시켜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알튀세가 학교의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 기능에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강력한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⁵⁾ 그람스가 지적했듯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관철은 피지배계급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나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는 무상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과 현실의 간극은 피지배계급의 복종심 재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⁴⁶⁾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해 인민들을 역사의 주체로

45) 루이 알튀세, 『재생산에 대하여』, 231~252쪽.

46)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393~400쪽.

호명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에 의해 주어진다. ‘주체형 인간’ 완성은 수령에 대한 충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사회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인민은 북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충격으로 유기체적 사회관계를 뒷받침했던 물질 토대가 와해됨으로써 시혜와 충성의 교환관계는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자생적 시장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형식적인 충성을 보이면서 공식 규범에 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영역의 확장이 마련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여 체제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질 토대를 회복하거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물질 토대의 회복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북한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인정하고 상당부분 제도 내로 수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때,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학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억압적 국가기구가 사회 전면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점차 약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본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1일 / 채택: 4월 3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리정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평양: 조선외국문출판사, 2014).

2) 기타 자료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 1977.9.5),”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김정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2014.9.5),”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연설(2012.4.15),”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리무석,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은 보통교육부문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 『인민교육』, 제4호(2012.8).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에 학교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인민교육』, 제1호(2008).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후대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인민교육』, 제1호(2009).

“세차게 타오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수백 개 대상의 중요 생산 공정과 설비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 『로동신문』, 2012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 김신일, 『교육사회학』(서울: 교육과학사, 2006).
- 부르디외, 피에르(Pierre Bourdieu)·장 클로드 파세롱(Jean-Claude Passeron), 『재생산』, 이상호 옮김(서울: 동문선, 2000).
- 알튀세, 루이(Louis Pierre Althusser),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옮김(서울: 동문선, 2007).
- _____, 『레닌과 철학』, 이진수 옮김(서울: 백의, 1991)
-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파주: 한울, 2006).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우영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 정영철 외,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 _____,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2) 논문

- 박찬석, “북한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4.10.28).
- 신효숙,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2010).
-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서울: 한울, 2008).
-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북한연구학회,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014.10.28).
- _____, “김정일 시대의 교육,” 『북한 교육 60년』(파주: 교육과학사, 2010).

_____,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개편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교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 『김정은체제에 대한 입체적 조명과 통일담론』(2014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4.4.11).

3)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14년 9월 26일.

3. 국외 자료

Walder, Andrew,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G. Walder(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Poli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Reproduction of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Lee, Mochul(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meaning, characteristic, limits of North Korean education-policy changes in a political perspective by applying Althusser's concept of 'reproduction of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This concept describes the reproductive function of education in capitalist society. In order to normalize the social reproductive function of education, North Korea needs funds for carrying out compulsory education, and reconfiguration of the dominant ideology. That is to say, North Korea must restore the material foundation to support the exchange relations of 'the great leader-party-mass' and reconstruct the dominant ideology to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since the 'march of hardship'. However, It is not easy for North Korea to accomplish these works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is current challenges of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n education, A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Louis Althusser,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reproduction